

코로나19 유탄맞은 '고압산소치료센터'

제주의료원시설 지난 18일부터 무기한 운영 중단 "코로나19 전용병실과 센터 인접해 불가피한 조치"

제주시 환자 서귀포 이송중 '골든타임' 놓칠 수도

유독가스 중독·잠수병 치료를 전담하는 제주시 지역의 유일한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병원 소개 명령 영향으로 무기한 운영을 중단했다.

고압산소치료센터를 갖춘 도내 의료기관은 제주시 지역의 제주의료원과 서귀포 지역의 서귀포의료원 등 2곳 뿐이다. 이런 와중에 제주시를 관할하는 고압산소치료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앞으로 제주시에서 유독가스 중독사고를 당한 환자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서귀포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 자칫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의료원은 두 차례에 걸친 소개 명

령에 따라 지난달 말 100병상에 이어, 이달 18일 나머지 100병상 등 병원 내 전체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전용 병상으로 전환했다.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시기는 두 번째 소개 명령이 내려진 이달 18일이다. 병원 1층에 조성된 이 센터(면적 189㎡)는 지난 2009년부터 유독 가스에 중독되거나 잠수병 증세를 보인 환자를 24시간 치료하고 있다. 지난 한해 제주의료원의 고압산소치료 건수는 1400여건이다.

고압산소치료센터는 서귀포에도 있다. 서귀포의료원도 제주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해부터 고압산소치료센터를 가동했다.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된 원인은 센터 위치와 관련이 있다. 의료원 측은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코로나19 환자 전용 병실과 맞닿아 있어 감염 우려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주의료원 관계자는 "서귀포의료원에는 별도 건물에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1차 소개 명령 때는 2층 병실만 코로나19 환자 전용 병상으로 전환(1층에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2차 소개 명령 때는 1층까지 코로나19 환자 전용으로 바뀌다보니 비감염자와 감염자 간에 동선이 겹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개 명령이 언제 해제될 지 알 수 없어 센터 운영 재개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운영 중단으로 해당 치료가 필요한 제주시 지역 환자는 차로 1시간 거리

에 있는 서귀포의료원에 가야한다.

서귀포의료원과 달리 제주의료원은 응급실이 없어 그동안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 대부분이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응급환자가 서귀포의료원에 간 것은 아니었다. 2017년부터 3년간 제주의료원에서 이뤄진 유독가스 중독 응급 치료는 14건이다. 예를 들어 제주시 아라동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된 응급환자는 제주대병원에서 1차 응급치료를 받고,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제주의료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 게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운영을 당장 재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환자들을 최대한 빨리 서귀포의료원으로 보낼 수 있게 이송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서울서 재택근무하며 연봉 7000만원 제주도교육청 '황제운전원' 사라진다

1월 세종사무소 개설·운영

제주도교육청 '도의 사무소'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황제운전원'으로 논란이 된 서울 주재 운전원은 사라진다.

2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세종특별시에 '제주도교육청 세종사무소'가 개설·운영된다.

세종사무소는 중앙정부 및 국회 등 주요기관 교류·연락과 함께 교육감 등 제주에서 육지로 가는 주요인사의 의전업무도 수행한다. 행정직 1명, 운전직 1명 등 2명이 상주한다.

세종사무소에 상주하는 행정직은 도교육청 내부에서 파견하고, 주 3회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운전직의 경우는 서울 주재 운전원이 가게 되는데, 해당 운전원이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현재 모집 공고가 나온 상태다. 서울 주재 운전원은 1년 중 100여 일만 일해도 7000만원의 연봉을 챙기는 '황제운전원'으로

논란이 인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말고도 도교육청 직원에 대한 수송·행정 업무도 지원한다"며 "사무실 임대 비용은 1년에 1000만원대로 서울보다 많이 저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보다 정부부처가 밀집돼 있는 세종시가 사무소 설치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2019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서울 주재 운전원 A씨에게 199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2년간 서울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또 A씨가 연간 근무일수 250여 일 중 2017년에는 114일(45.6%), 2018년에는 169일(67.6%)만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이외의 날에는 자택에서 대기만 하고 있는데도 연간 약 7000만원을 지급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남방큰돌고래의 군무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28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평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민 생명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도, 필수노동자 지정·지원체계 구축 실태조사

제주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필수업종 지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도내 소재 각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워드코로나 시대로 이행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업무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돼 사회기능 유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 차원의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수업종'의 범위 지정 및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각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 조사에 의해 필수업종이 정해지면 감염 및 산업재해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 과로 및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부터 보호 등 제주자치도 필수노동자에 대해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호 및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 특성에 맞는 필수업종 지정과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과도 병행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업종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토대가 될 '제주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이달 15일 도의회 제389회 정례회에서 통과됐고, 지난 14일에는 정부가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감사원, 비자림로 확장공사 주의 처분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 사실을 광고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공익 감사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비자림로 확장공사 사업 시행자인 제주도가 2019년 5월 30일과 올해 6월 20일 두차례 공사를 중

단하면서 이런 사실을 관할당국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제주도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공

사를 중지할 때 사업 시행자는 이런 사실을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앞서 제주도는 2019년 5월 30일 법정 보호종 발간에 따른 조사와 피해 저감 대책 마련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공사 중지 요청을 이유로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중단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가 지난 6월 공익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상민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일수록 돈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최대한 물기제거

-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장비)**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장비)에 배출 ※비닐봉투는 사용하지 마시고, 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만 넣어주세요.
- 개별 용기보급 음식점 등**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 ※다량 배출 사업장은 제외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생활 개선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 알맞은 양의 식재료를 알뜰하게 구입 식재료 중동구매 NO! 장보기 노트 활용하기
- 음식을 차릴 때는 먹을 만큼만, 먹을때는 남김없이 남기는 재료 없는 건강한 음식조리 간소한 식단을 통해 잔반 제로화
-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에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기

올바른 음식물쓰레기 분리방법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 채소류**
 - 양파, 배추, 양배추, 무 등 채소류의 곱썰질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고추대, 옥수수대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뼈다귀와 털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등의 껍데기
 -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과일껍질
- 기타**
 - 계란 등 알 껍데기
 - 각종 차류 및 한약재 찌꺼기

최대한 물기를 제거바랍니다.
이물질(비닐, 병뚜껑, 칼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바랍니다.
버릴때는 주변에 음식물이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흰색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배출

Jeju 제주시 ■ 문의처 : 제주시 생활환경과 064. 728-3181~7, 읍·면·동주민센터